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http://sri.kostat.go.kr>

2021



통계청

통계개발원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불평등의 변화

유경원 (상명대학교)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시장소득 분배지표는 악화되었다.
- 시장소득 분배의 악화는 주로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들 계층의 많은 수가 코로나19 충격에 취약한 임시·일용직에 종사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처분가능소득이 확대된 공적이전을 통해 증가하여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주거비와 이자비용은 필수지출로 실질적인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분배정책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슈를 발생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팬데믹에 기인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각국 정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재정과 통화·금융 정책을 수행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회적으로는 소득격차와 자산양극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전후 가계소득 분배 변화와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이전의 효과를 재분배정책 관점에서 살펴본다.¹⁾ 아울러 코로나19의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및 주택가격 급등으로 우려되는 주거비, 이자비와 같은 필요경비지출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의 사회동향 2021 | 소득·소비·자산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2020년은 대부분 국가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만큼 그 충격이 컸다. 2021년 들어 코로나19 백신 보급의 확대로 이러한 충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최근 전염력이 높아진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해 재확산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확산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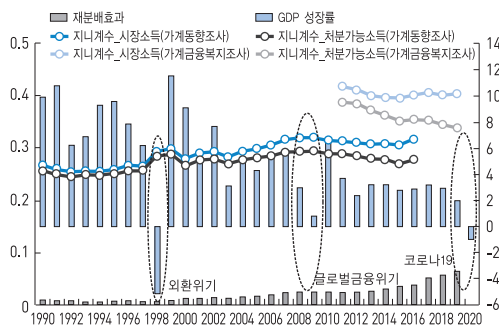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불평등도 비교

우리 경제는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GDP 성장률은 -1%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¹⁾ 소득분배 관련하여 보다 정확도 높은 분석을 위해서는 연간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현 분석 시점에서는 이용 가능하지 않으므로 제한적이지만 시의성 있는 분석을 위해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를 사용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겪는 역성장이었다. 통상 경기침체 시기에 분배문제 역시 심화되는데 [그림 V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와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마이너스 성장 내지 매우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가운데 분배지표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정부의 조세 및 재정 정책으로 나타나는 공적이전으로 인해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분배 개선은 통상적으로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공적이전을 감안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계산이 된다. 즉 이 차이가 커질수록 지니계수로 나타낸 분배의 개선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차이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 소득재분배에 있어 정책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12] 경제위기별 경제 성장 및 분배, 재분배 효과 추이, 1990-2020



주: 1) 세로축에서 좌측은 지니계수이고, 우측은 GDP 성장률(%)임.

2) 재분배 효과는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를 활용해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계산되었으며, 이 차이가 클수록 공적이전 등 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원자료, 각 연도.

과거 위기들이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반면 이번 위기는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이지만 그 경제적 영향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염병 대확산이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고 이로 인해 저소득계층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과 일용·임시직의 구직과 소득에 영향이 큰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소득불평등 관련 연간지표가 아직 공표되지 않아 「가계동향조사」(전국 1인 이상 전 체가구) 자료를 이용하여 분기별 소득분배지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가 미친 소득불평등의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²⁾

비교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와 확산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2020년 2분기 이후 2021년 1분기까지로 그리고 이전 시기는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로 상정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소득변수는 두 가지이다. 먼저 시장소득으로 「가계동향조사」에서 정의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값이다.³⁾ 다음으로

2)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가계부 작성방식 및 분기통계로서의 한계(행정 자료 미이용)로 향후 보다 엄밀한 논의는 연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개념을 OECD Wave6 정의를 토대로 하였으며 사적이전지출을 빼지 않았다. 2021년 1분기부터 적용된 OECD Wave7에서는 소득분배지표 기준소득 개념으로 정의한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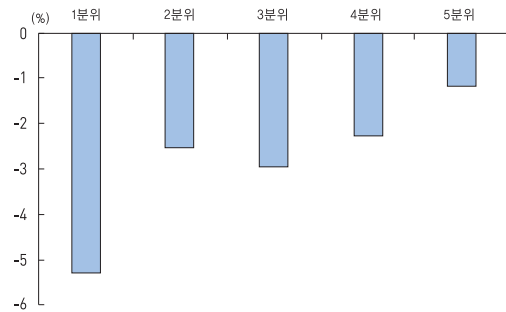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포함시키고, 여기에서 공적이전지출을 제한 것이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과 세금환급금이 포함되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도 이 처분가능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득개념의 차이를 이용하면 코로나19 확산 전후 조세 및 재정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불평등지표는 통상적으로 지니계수를 이용하는데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커짐을 나타낸다. 한편, 지니계수가 중위소득 계층의 소득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적으로 다양한 분위배수를 이용하여 양극단 계층의 소득 변화를 살펴본다. 대표적인 5분위 배수($P80/P20$)는 하위 20%와 상위 80%의 소득 계층 즉, 하위 1분위와 상위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비교하는 지표이며 $P90/P10$ 은 소득 하위 10% 대비 상위 90%를 비교하여 양극단 계층의 소득격차를 살펴보는 지표로 사용된다. 아울러 중위소득 즉 50%에 해당하는 계층과 상위 10% 또는 하위 10%를 비교하여 중-저 또는 중-고 계층 간 소득격차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지표가 $P50/P10$ 과 $P90/P50$ 이다.⁴⁾

먼저 소득계층별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소득 변화율의 평균을 구

하였다(그림 VI-13). 202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경제주체들의 시장소득은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1분위 소득계층의 충격이 다른 계층에 비해 1.8~4.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3]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증감률(시장소득), 2019. 2/4~2021. 1/4



주: 1) 증감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2019.2/4~2020.1/4) 대비 확산 이후 기간(2020.2/4~2021.1/4)의 소득 증감률로 각 분기별 소득 증감률의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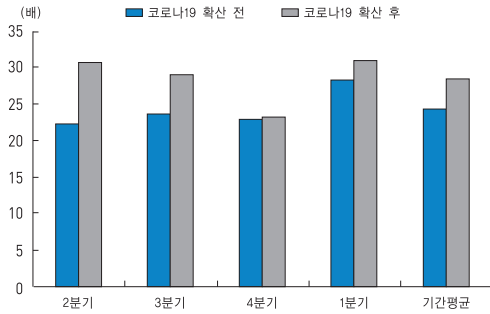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그림 VI-14]에서 5분위 배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비교했을 때 2020년 2분기와 3분기의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림 VI-15]에서 하위 10% 소득 대비 중위계층 소득을 비교한 $P50/P10$ 지표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중위소득과 하위 10% 소득계층간의 격차가 보다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수치도 코로나19 확산 이전 10.4배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13.4배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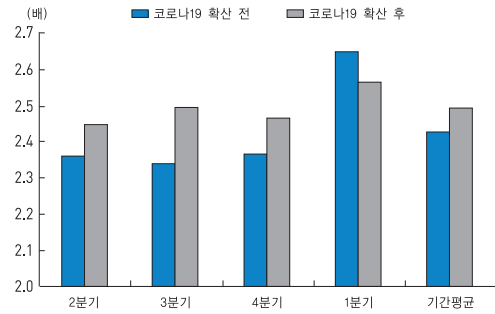
4) 본 고의 분배지표 관련 수치는 가구단위로 작성한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균등화소득 기준의 수치(그림 VI-12)와는 차이가 있다.

[그림 VI-14] 코로나19 확산 전후 5분위배율(시장소득) 비교, 2019. 2/4-202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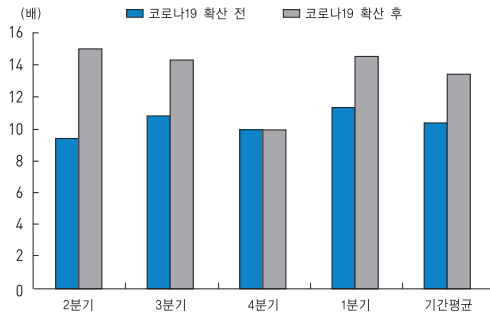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그림 VI-16] 코로나19 확산 전후 P90/P50 배율(시장소득) 비교, 2019. 2/4-202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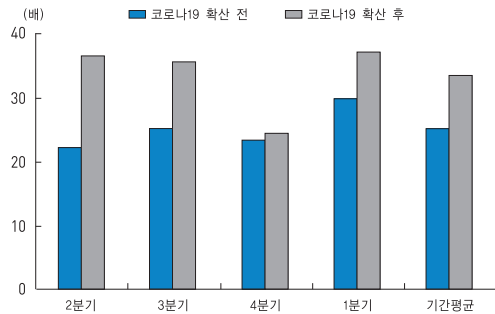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그림 VI-15] 코로나19 확산 전후 P50/P10 배율(시장소득) 비교, 2019. 2/4-2021. 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그림 VI-17] 코로나19 확산 전후 P90/P10 배율(시장소득) 비교, 2019. 2/4-2021. 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한편 중상위 계층의 격차도 이와 같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살펴보았다. [그림 VI-16]에서 P90/P50 지표는 중위계층 소득 대비 상위 10% 계층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데 앞선 중-

저 소득계층 격차와는 유사하지만 크기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 확산 이후 이들 계층 간 분배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정도는 평균 2.5배에서

2.6배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 기간 동안 중위소득과 상위소득 간 격차가 하위소득과 중위소득 격차만큼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림 VI-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10%와 하위 10%를 비교한 P90/P10은 그 격차가 5분위 배율에 비해 보다 확대되고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소득이 악화되었으며 이는 중-고 소득계층의 격차보다는 중-저소득계층 특히 저소득계층의 소득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분배 악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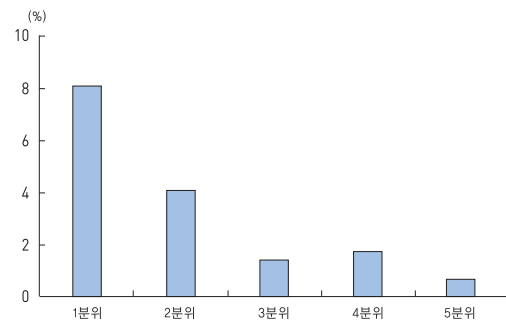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전후 재분배 정책의 효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을 5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이래로 현재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한 재원을 조세 및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적이전지출이 가계의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포함시키고 공적이전지출은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와 관련 지표를 시장소득 분배지표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재분배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VI-18]에서 코로나19 전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앞에서 본 시장소득과 달리 1, 2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계층에 대한 공적지원이 보다 더 확대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림 VI-18] 코로나19 확산 전후 가구소득 증감률(처분가능소득) 비교, 2019.2/4-2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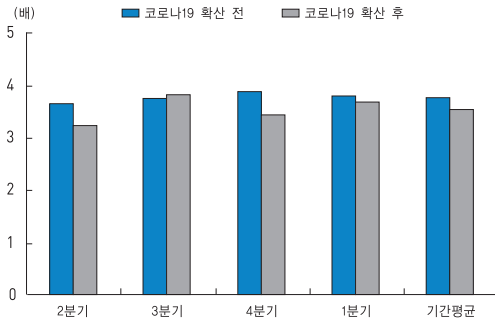


주: 1) 증감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2019.2/4-2020.1/4) 대비 확산 이후 기간(2020.2/4-2021.1/4)의 소득 증감률로 각 분기별 소득 증감률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앞서 확대되었던 시장소득 기준 하위 10분위와 중위 50분위 그리고 상위 90분위의 격차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림 VI-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 확산 초기 15배까지 벌어졌던 시장소득 격차가 정부의 재분배정책으로 2020년 2분기에 3.2배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그림 VI-16]과 [그림 VI-20]을 보면 P90/P50 지표의 경우 코로나 확산 전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VI-19] 코로나19 확산 전후 P50/P10 배율(처분가능 소득) 비교, 2019.2/4-2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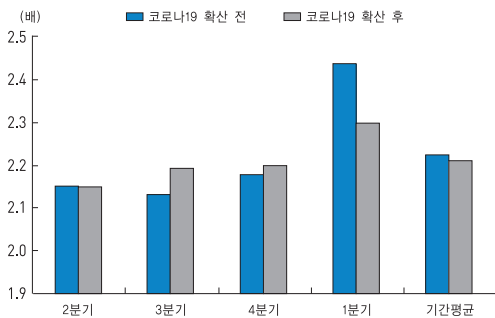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그림 VI-20] 코로나19 확산 전후 P90/P50 배율(처분가능 소득) 비교, 2019.2/4-2021.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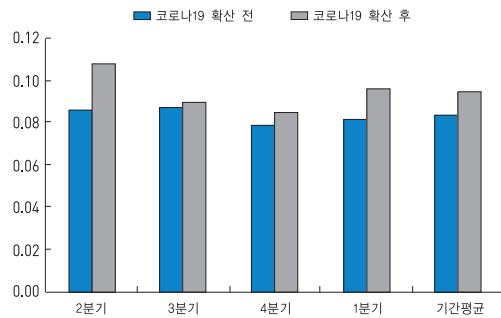
2)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이와 같은 정부의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시장 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로 측정해 보면, [그림 V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2분기에 0.108로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2분기에 비해 25% 이상 컸으며, 나머지

분기 모두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여 재분배 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재분배정책은 소득 감소폭이 가장 컸던 저소득 취약계층을 목표로 하여 공적이전 확대 등을 통해 이들의 소득보전을 이루어낸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소득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VI-21] 코로나19 확산 전후 재분배 효과 비교, 2019.2/4-2021.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재분배효과=시장소득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3)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4) 저자 지니계수 산출방법에 따른 분석결과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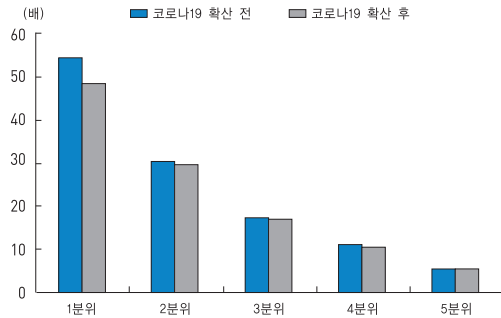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기 시장소득 불평등 악화의 주요 요인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어떤 측면에서 소득 불평등을 야기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앞서 분석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분배 악화의 주요 원인은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 집중된 소득감소가 주된 요인이었다. 이들 계층이 왜 코로나19

소득충격에 취약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하위 소득계층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워 지자 관련 업종의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실직과 소득하락이 두드러졌다. [그림 VI-22]의 소득계층별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면, 1, 2분위 계층의 경우 고소득계층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이들 일자리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반면 상용직 비중은 고소득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VI-22]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임시·일용직 비중 비교, 2019.2/4-2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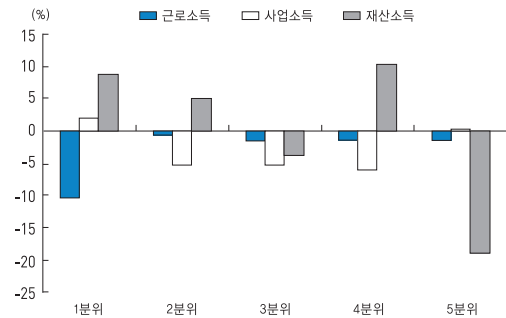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임시·일용직 비중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그림 VI-23]에서 보듯이 코로나19의 확산이 1분위 소득계층의 주된 종사상 지위인 임시·일용직에 충격을 크게 미침으로써 이들의 근로소득이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평균적으로 가장 크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다른 계층이 1% 안팎의 낮은 근로소득 하락을 나타낸 반면, 1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10.8%의 높은 근로소득 하락률을 나타내어 이들 계층의 근로소득 하락이 소득 불평등 확대의 주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⁶⁾

[그림 VI-23]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 증감률, 2019.2/4-2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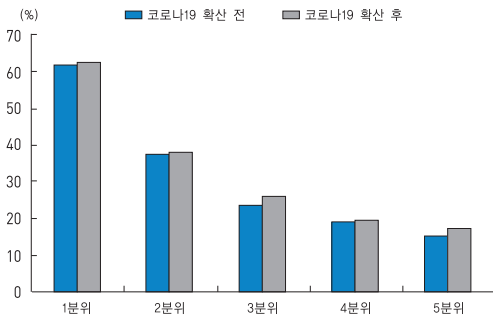
주: 1) 각 소득 증감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2019.2/4.-2020.1/4) 대비 확산 이후 기간(2020.3/3-2021.1/4)의 소득 증감률로 각 분기별 소득 증감률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9.2/4.-2021.1/4.

한편 이들 저소득계층의 또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고령층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그림 VI-24). 따라서 이들 계층의 경우 [그림 VI-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가능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이전소득 비중이 높았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그 비중이 보다 확대되었

5)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할 때 소득분위별 소득구성항목에 대한 분석은 표본규모가 매우 작아지는 한계가 있어 [그림 VI-23]에서 나타난 5분위의 재산소득 감소는 실제에 비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임시·일용직 종사자의 실직, 그리고 소득감소가 소득불평등 악화에 주된 요인이었음을 계량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송상윤, 2021).

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적이전지출이 코로나19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배의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⁷⁾

[그림 VI-24]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60대 이상 가구주 비중 비교, 2019.2/4-2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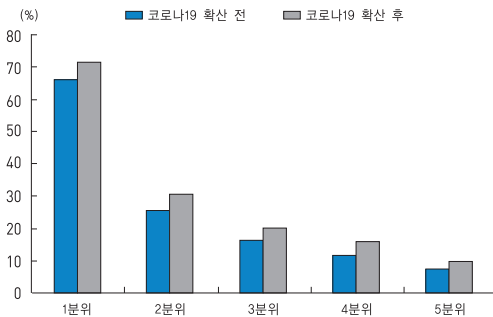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임시·일용직 비중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그림 VI-25]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 비교, 2019.2/4-2021.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전소득 비율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코로나19 확산 전후 '실효소득'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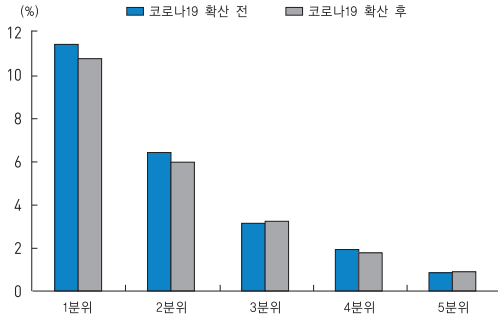
한편 코로나19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득('실효소득')의 분배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하였다. 최근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가 급등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효소득'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실효소득'은 가계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하며, 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 중 주거비와 이자비용을 제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주거비는 소비지출의 12대 비목 중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교통 등의 비목과 더불어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소비지출이다. 특히 주거비에 주목한 이유는 주거비가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⁸⁾ [그림 VI-26]에 제시된 소득계층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보면, 자가주택 비중이 높은 고소득계층(5분위)에 비해 저소득계층(1분위)의 주거비 부담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전후로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거비 부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계층 간 격차는 실질적인 소득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7) 지니계수를 소득항목별(근로, 사업, 재산, 이전)로 분해해 보면 동 기간 중 근로소득의 불평등 확대에 대한 기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수치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8) 가계동향조사 상의 주거비 추이와 역진성에 관련한 논의는 김영희·정미옥(2019)을 참조

[그림 VI-26]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비교, 2019.2/4-20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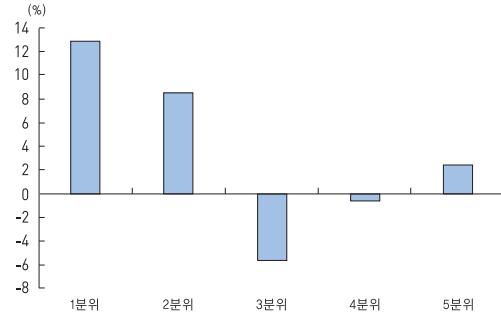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처분가능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낮아진 이자율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이자부담 가구가 늘게 된 것도 '실효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높아지면서 자산취득은 물론 부족한 생활자금 마련까지 부채에 대한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 역시 가계의 우선지출 항목이기에 실제 쓸 수 있는 돈, '실효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VI-27]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늘어난 이자비용을 살펴보면, 1, 2분위 계층의 이자비용이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자부담 역시 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림 VI-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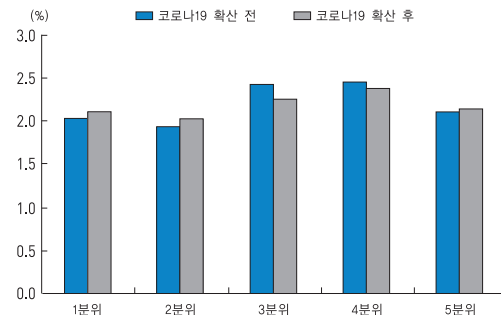
[그림 VI-27]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증감률, 2019.2/4-2021.1/4



주: 1) 증감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2019.2/4.-2020.1/4) 대비 확산 이후 기간(2020.2/4-2021.1/4)의 이자비용 증감률로 각 분기별 이자비용 증감률의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낮은 2% 수준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분배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채의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이자 부담의 격차는 향후 금리가 인상된다면 '실효소득' 분배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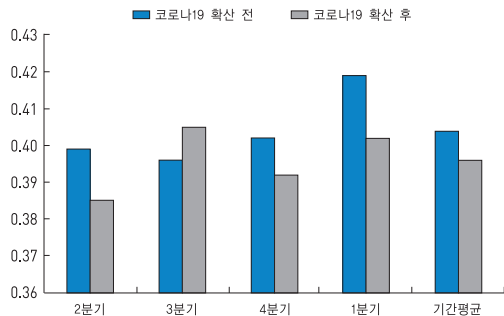
[그림 VI-28] 코로나19 확산 전후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 비교, 2019.2/4-2021.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9.2/4.-2021.1/4.

이와 같은 주거비와 이자비용의 실질적인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실효소득' 지니계수를 구하여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VI-29]와 [그림 VI-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비는 예상한 대로 실제 소득분배를 보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미미한 이자비용의 효과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코로나 전후 주거비 및 이자지출로 인한 '실효소득' 분배 악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⁹⁾ 이는 코로나 19 기간 중 경기침체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었고, 금리 인하로 인해 분배상의 부정적인 효과가 보다 확대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I-29] 코로나19 확산 전후 실효소득 지니계수 비교, 2019.2/4-2021.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실효소득=처분가능소득-(주거비+이자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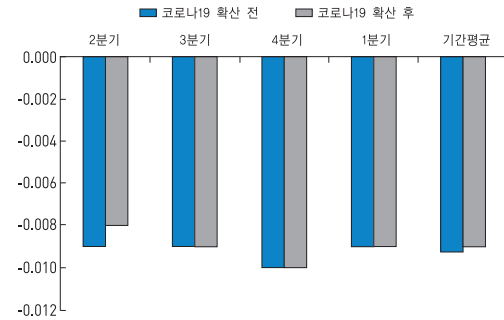
3)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4) 저자 지니계수 산출방법에 따른 분석결과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9)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한계로 나타난 문제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엄밀한 논의는 향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VI-30] 코로나19 확산 전후 주거비·이자비의 실효소득 재분배 효과 비교, 2019.2/4-2021.1/4



주: 1)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은 2019년 2/4분기-2020년 1/4분기, 확산 이후 기간은 2020년 2/4분기-2021년 1/4분기임.

2) 재분배효과=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 실효소득 지니계수. 마이너스 값은 분배악화를 나타냄.

3) 기간평균은 해당 기간 분기 평균값임.

4) 저자 지니계수 산출방법에 따른 분석결과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2/4.-2021.1/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분배 논의의 시의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향후 정확도 높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간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글의 분석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잠정적으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소득하락이 발생하여 시장소득 기준 분배 악화가 확산 초기 크게 나타났으나 공적이전 확대 등 정부의 재분배정책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완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소득 분배악화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경제의 도래로 저소득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급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과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 상승은 가계가 실제 쓸 수 있는 '실효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저소득계층 소비지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은 분배악화 효과를 확인하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이자 부담은 코로나19 이후 저금

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계층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액수 자체가 크지 않아 분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구조의 변화가 임시·일용직 계층과 고령자 가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재분배정책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경기회복 움직임과 함께 높아질 수 있는 주거비와 이자 부담을 고려할 때 분배 악화가 더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 및 금융지원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송상윤. 2021.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 제2021-9호, 한국은행.
김영희 · 정미옥. 2019.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가구의 주거비 추이: 2010~2018년." 「KOSTAT통계플러스」 2019년 가을호, 통계청.

